



연 수 구 보 건 소



수신 관내 의료기관의장 귀하

(경유)

제목 의사 집단행동 관련 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(의료기관 외 의료행위) 적용 안내

1. 관련문서

- 가.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-1790(2024.03.19.)호, -1836(2024.03.20.)호
- 나.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정책과-6308(2024.03.21.)호, -6309(2024.03.21.)호

2. 의사 집단 행동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진료공백 심화가 우려됨에 따라, 의료인력 부족 및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의료행위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.

3. 이에, 보건복지부에서는 「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」에 따른 예외적용 사유(의료기관 외 의료행위) 인정 기준을 마련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극 적용하도록 당부하였으니, 각 기관에서는 아래 기준을 참고하시어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예외 사유 적용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보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관련법규

의료법 33조(개설 등)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, **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.**

- 1.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
- 2.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
- 3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**
- 4.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
- 5.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

- 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 예외 사유 인정 기준 -

(적용대상)

① 수련병원 등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, ②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, ③ 기타 지역여건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(시행기간)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보건의료 재난 위기 '심각' 단계기간 동안 한시적 시행

끝.

